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관철 활동을 전개해 온 '교원의 학교 폭력 생활지도·사안 처리 면책권 부여' 입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로 실현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교 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및 지원을 신설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 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교원이 학교 폭력 관련 소송, 고소·고발을 당할 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폭력 책임교사의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제11조의4(학교 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및 면책)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학교 폭력 사안 처리나 지도는 그동안 학교, 교원의 애환이자 악성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교총과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학폭법 개정안의 통과로 교원이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

어나 교육적, 회복적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지난 4월 5일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회를 개최 전 '학교의 고충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마련해 제출하고 △학폭 지도·처리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권 부여 △민·형사 소송비 지원 △기피 업무 0순위인 학폭 책임교사 수당 신설·지급 등의 지원방안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4월 12일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면책 법안 마련'을 포함, 약속했고, 이어 학교 폭력 지도·처리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이 국회에 발의(5.12)됐다.

월 21일 '교권 4법' 통과에 이어 학교 폭력예방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막이 강화됐다."라며 "이제는 학교 폭력 사안으로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민원이나 소송이 남발되지 않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존중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도 힘쓰겠다" 라고 덧붙였다. 이어 "나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 밖 사안도 학교 폭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 폭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며 "학교 폭력의 정의와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쁜 기자



과열 경쟁·사교육 부담 완화 방향 공감

교육부가 수능 선택과목을 없애고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전환하는 '2028 대입개편 시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교육계는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방향에 공감하고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내신 부풀리기, 소규모학교 내신 불리 문제 등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입제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 내용이 동시에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향후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고1이 되는 학생부터 치를 대학입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지적하며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충분한 교사 증원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안정되고 대우받는 직업이 지금처럼 좁은 문이라면 대입 개편만으로 과열 경쟁과 사교육을 완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능력중심사회 실현과 고교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신 5등급제와 관련해서는 과열 경쟁의 원인인 9등급제를 5등급으로 전환하고 고1과 고2·3 내신 산출 방법을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상대 5등급제는 내신 부풀리기 문제를 완화하는 과도기적 조치로 절대평가로의 연착륙을 위해 긍정적이며 특목고, 자사고 쏠림 현상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대학으로서는 5등급제로 인해 내신 변별력이 약화 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대학은 등급 대신 원점수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점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신 논·서술형 평가 확대는 교사 부담을 넘어 자칫 공정성 시비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어 반드시 학교 여건을 고려하고 교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쁜 기자

학교폭력 경찰 이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한 통화연결음을 지난 9월 5일 전국의 학교로 배포했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공모전'에 총 899편의 공모작이 접수되었고, 이후 두 차례의 심사 과정과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6편이 수상작(최우수1, 우수2, 장려3)으로 선정됐다. 수상작 중 3편(최우수1, 우수2)은 총 6개의 음성(어린이·청소년·성인 남녀)으로 개발돼 학교 현장으로 안내되며,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학교급 및 학교 구성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통화연결음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통화연결음은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고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선 기자

요성을 체감하여 공모전에 참여하였다고 밝히며, 학교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고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선 기자

교권침해 대응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

교육부, 2014년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1396) 이후 두 번째 특수번호 사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0일 (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 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 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상담·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2023년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

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2024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INDEX

- ▶ 1면 교육정책
- ▶ 2면 전국종합
- ▶ 3면 [인터뷰]이완섭 서산시장
- ▶ 4면 전국교육청
- ▶ 5면 전국종합
- ▶ 6면 전국교육
- ▶ 7면 전국교육
- ▶ 8면 전국교육
- ▶ 9면 전국·문화예술
- ▶ 10면 오피니언
- ▶ 11면 오피니언
- ▶ 12면 전면광고



화재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생명 구조타올 K2

